

구두 닦고, 개밥 주고… 눈 밖에 나면 “너 나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
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
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
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
보받아(D 보좌관)
임신했다고 잘라… E 의원 4년간 보좌
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
민국 보좌진 위상의 민낯이다. 고용 유
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회의원 보좌진
의 현실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생보다도 나을 게 없다. 겉으로 권력을
움켜쥔 듯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은 슬
프고도 적나라하다. ▶관련기사 4·5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
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
한다. 이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그 어
떤 보호장치도 없다는 의미다. 의원 한
마디, 기분에 따라 즉시 해고당할 수도
있는 이들은 그야말로 파리복숭아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의원 집사 수준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 공무원
잡일 강요·과로·부당해고 일쑤
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다. ‘의원 집 개밥 주기’ ‘의원 구두 닦
기’ ‘의원 가족 일정 수행이나 지인 여행
가이드’ 등은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선
거, 주말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추
가 수당 없이 수시로 동원되기 일쑤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
무가 아닌 주 52시간 수면’이라는 풍자
글은 2700명의 보좌진이 공감하는 바
다. 심지어 국감 이후 과로사한 이들도
있다.
결국 몸과 마음을 바치며 개인 생활까
지 포기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게 부당해
고, 부당대우뿐이라면 가혹하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
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

다. 의원이 면직 30일 전까지 직권면직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미
온적이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의 시계는 24시
간, 365일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
이 따로 없다”며 “새벽에도 휴대폰을 손
에 쥔 채 선잠을 자는 우리에게 보좌관을
배려해주는 의원실은 선망, 부러움의 대
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노
동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노조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이 된다 해도
사실상 의원의 임명권에 법적으로 개입
하기는 힘들다. 다만 노조 존재 자체만으
로 이들 의식한 의원들의 태도가 다소 바
뀔 희망은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데일리 기자 flowerslee@김윤호 기자 uknow@



그래도 우리는… 총 대선 촛불
20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지난해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세 여성 미야 테 테 카인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과 공포탄을 발포하면서 이날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이날 사망한 2명을 포함,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군경에 의한 사망자 수는 최소 4명이다. ▶관련기사 8면
양곤/EPA연합뉴스

‘백신접종 불모’로 총파업하겠다는 의협

범죄의사 면허 취소 반발
정 총리 “엄중 대처” 경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
사협회(의협)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의 총파업 예
고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
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
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볼

모로 한 집단행동 예고에 비판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사회 회장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
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
국 의료 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
몰 것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
회를 중심으로 전국지사 총파업 등 전면
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
울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
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정 지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
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국
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장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
는 만큼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
다. 박미선 기자 only@

정부 “年 20%”로 낮출 때, 사채는 “2000%”

변종 키우는 법정금리

스페셜 e리포트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2018년 2월 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중 10명 중 8명이 24% 대출 아래로 흡수됐지만, 나머지 2명은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이자의 벽’이 재배치되면서 불법의 영역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벽 안에서 수천에서 수억 원이 쉽게 오가지만, 테두리 밖의 소비자는 5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일주일 이자로 30만 원을 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순기능은 존재하지만, 순기능 아래에 묻힌 부작용은 ‘소수’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을 비판하며 통용되는 ‘악탈적 대출’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회사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악탈적 대출 규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합법이 될 수 없는 시장은 버젓이 호황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1일 이투데이가 인터넷 대출 거래 사이트인 ‘대출나라’의 사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만 한 달 평균 8000~1만 건가량의 소액 대출 문의가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생활비 조달 관련 대출 내용이 급증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대출 가운데 99% 이상이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그중 100만 원 이하의 주수(週收·일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정부,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시장 “되레 저신용자 대출문 좁혀”

50만원 빌려 ‘1週 30만원’ 이자도

주일마다 갚는 대출)뿐 아니라 일수(日收·하루마다 갚는 대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만 원 이하 일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구간이다. 매달 이자를 내는 ‘월변’이나, 아주 단기간 빌리는 ‘급전’ 문의가 올라오지만, 문의와는 별개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

어떤 업체는 채무자에게 월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몇 달간 소액 일수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대출나라 이용자인 강모(남성·40대) 씨는 “B대부업체가 월변은 문의자가 많아 당장은 어렵고, 한번 주수를 이용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래를 요청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주수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일주일 이자만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B 씨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들이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법정 최고금리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객진산 기자 jinsan@

SM ‘허위 세금계산서’ 10억여 원 과태료

국세청, 이수만·배용준 세무조사

이수만

배용준

의 과태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관련 업계는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과세 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 함께 이성수 대표, 배우 배용준 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에 추정금 202억 원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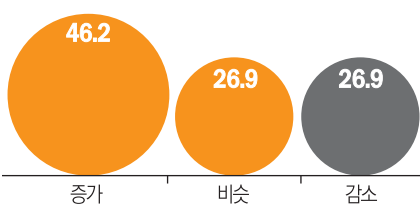
21일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주식 양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배용준 씨를 상대로 주식 양도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이달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법인세 등 20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통고처분’에 따른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통고처분’은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범칙자에게 과태료 등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

기업, 실적 줄어도 사회공헌 늘렸다

경총, 상위 기업 34곳 조사
지난해 코로나 극복 활동 적극
구호품 지원, 무료방역 서비스
73% “사회공헌 지출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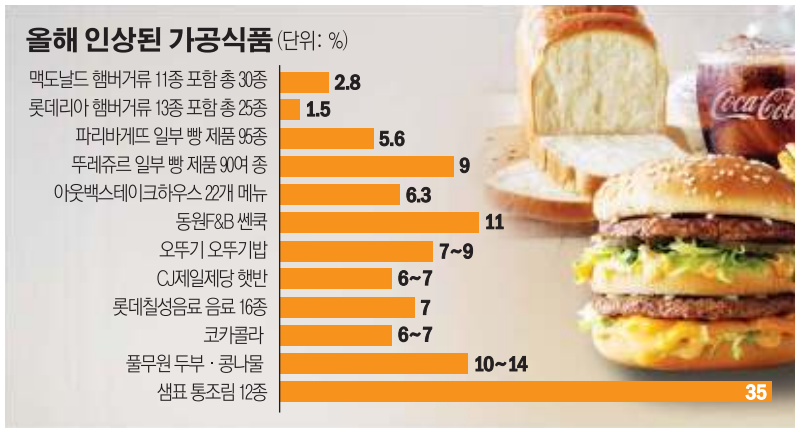
기업 사회공헌 지출 증감률
(단위: %, 2020년 기준)



불어 코로나 구호 인력 1만 명 대상으로 마스크 같은 감염예방 물품 및 건강관리 물품 키트 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해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 활동을 시행했다고 응답한 34개 기업 중엔 지난해 영업이익(1~3분기 기준)이 감소한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61.8%다. 경총은 “응답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 등을 위해 신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73.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포함한 총 사회공헌 활동 지출이 전년 대비 비슷했거나, 더 많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이 2019년보다 감소한 기업 중 68.8%가 사회공헌 지출을 2019년 대비 확대·유지(증가 37.5%, 비스 31.3%)했다. 응답 기업의 58.6%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경영실적이 악화했음에도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지속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경영 실적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해 사회공헌 활동에 자율적으로 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익공유제보다는 반(反)기업 정서 해소와 같이 기업의 자율적 사회공헌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햄버거·빵·즉석밥 가격 줄인상 현실화된 ‘애그플레이션’ 공포

국제 곡물 가격 가파르게 상승
맥도날드 2.8% ↑, 라면 오를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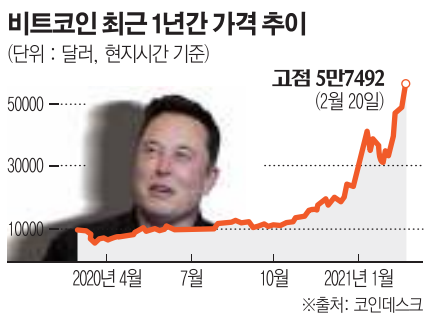
연초부터 외식 및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3차 애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동반 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두, 옥수수, 밀 등의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식품 전반에 대한 도미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25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년 만의 가격 인상으로, 햄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개 품목에 대해 평균 2.8%(100~300원) 가격을 올린다. 롯데리아도 1일부터 버거류 13종을 비롯해 디저트류, 차킨류 등 메뉴 25종의 가격을 올렸다. 롯데리아의 인상 폭은 100~200원 수준으로 평균 인상률은 1.5%이다. 이들 기업은 앞서 2차 애그플레이션 직후인 2012년 동시에 가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인건비 상승과 닭고기·돼지고기·달걀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아 애그플레이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빵값도 올랐다. 베이커리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는 지난주 95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6% 올렸다. 앞서 뚜레쥬르도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90여 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약 9% 인상했다. 즉석밥, 두부, 콩나물, 통조림 등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밥상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쌀값 상승으로 즉석밥 1위 업체 CJ제일제당은 이날 말부터 ‘핫반’ 가격을 6~7% 올리기로 했다. 오투기도 설 연휴 이후 ‘오투기밥’ 가격을 7~9% 인상하기로 했다. 풀무원은 지난달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샘표식품은 지난달 반찬 통조림 제품 12종 가격을 평균 35%, 콩치와 고등어 통조림 제품 4종 가격을 평균 42% 인상했다. 코카콜라는 편의점 제품을 100~200원 올렸으며, 롯데칠성음료도 6년 만에 평균 7%가량 음료 가격을 인상했다.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와 오로나민C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 밀 선물 가격이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미국 소맥협회 기준)를 경신함에 따라 라면, 제과업체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곡물 가격 상승이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화했음을 감안할 때 2분기부터는 곡물 소재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비트코인 불 지핀 머스크도 “과열”

시총 1조달러 돌파, 테슬라 추월
美 엘런 “비트코인, 투기적 자산”

‘비트코인 열풍’에 불을 지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연일 신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수차례 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던 머스크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100조 원)가 넘는 상황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머스크 CEO는 가상화폐 회의론자이자 금분위제 지지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가 “비트코인이나 법정통화보다 금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트위터 트윗에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높아 보인다”는 댓글을 달았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체 투



자처로 주목받으면서 3년 만에 초특급 광풍을 다시 몰고 오는 중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5만7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7000억 달러 규모인 테슬라보다 덩치가 커졌다. 이더리움 가격 역시 2041달러를 기록, 올해에만 170%가량 뛰었다. 다만 이러한 랠리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18일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들리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창조하는 기술 -

LS는 당신 가까이서
최고의 역량과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개정안’ 갈등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또다시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 지 6개월 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국민 피로도가 높을 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가중처벌·평등원칙 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장에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백신 접종 협력중단 검토 무차별 징계 피해 결국 국민에”

민주당 김남국 ‘백신 보이콧’에 “그게 강파지 의사입니까” 비판 시민들도 “의협 반응 과하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반발 근거로 가중처벌 및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외에 직업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처벌이 되고, 특정 직업군을 다른 직종과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생명 볼모로 한 이기주의”= 이같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은 곧바로 반박하면서 의협과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하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강파지 의사입니까”라고 평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SNS를 통해 “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도 반박에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린다”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만약 이를 발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 “다른 전문직도 자격정지”=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또다시 시위를 한다며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료인 면허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대체로 총파업을 언급하는 의협의 반응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31) 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게 의사 탄압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의협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모(48) 씨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라고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 구로구의 이모(35) 씨는 “의사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 왜 굳이 분란을 만드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홍인석 기자 mystic@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 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경제성 평가 꼴찌에도 강행... “법·제도 무력화” 지적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전문가들에 따라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까지 대규모 현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가덕도신공항이 2016년 공항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김해 확장안, 밀양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11개 평가 항목(중분류 기준) 가운데 8개에서 꼴찌였다. 과도한 투자비용뿐 아니라 비행공적 위험, 시장 잠재력, 융합 확장성,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생태계 영향,



김태남(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부산시장 경선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기타 위험 등에서 낙제점을 맞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가 선거용으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급히 상경해 이를 저지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와 공동대표는 “여야가 이번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예타 제도는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선거 때마다 특정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예타 제도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KB 금융그룹
국민의 생명,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 활용의 정점을 찍다!

PAY의 활용 정점
자유롭게 어디서든 금융까지

KB Pay의 활용·점점

자유롭게 활용!
카드, 은행계좌, 포인트 등록으로 다양한 결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KB Pay

어디서나 활용!
MST, QR코드, 바코드, NFC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활용하는 KB Pay

금융까지 활용!
국내외 송금, 멤버십 적립, 소비관리까지 결제를 넘어 금융까지 활용하는 KB Pay

QR코드

본광고서인 삼미빌 제11803-00008-429421 01 01 7개월

KB 국민카드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여의도 1번지’ 냉혹한 현실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에서도 B 의원은 20여 명의 보좌진을 갈아치웠다. 비단 A, B 의원만의 얘기는 아니다. 사실상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해고된 보좌진의 사연도 기구하다.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통보를 받은 경우도 허다하며 상식 밖의 이유로 내쫓긴 이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한 1대부터 서서히 꿈틀거리며 고질병, 불치병이 돼버렸다.

한 비서관은 C 의원실 근무가 결정된 다음 날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C 의원 지역구 유지 아들 추천이 들어와 밀려난 것이다. D 의원의 경우 선거철이 다가오자 지역구 인원 확충을 위해 기존 비서관을 내보내고 선거 관련 정책 비서관을 채용했다. 이 같은 이른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는 국회 내에서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갑자기 백수가 된 보좌진도 수도룩하다.

이외에도 의원 기준에 미흡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복장이라는 이유로, 또 임신한 여직원이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후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의원 말 한마디에 의원실 보좌진 전원이 교체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보좌진이 ‘파리목숨’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며 해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국회사무처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8대~20대 국회에서 각각 1143명, 1300명, 1634명의 보좌진이 면직됐다. 매 국회 10%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21대 국회는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국회를 떠났다.

물론 이 기간에 직권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077명 중 19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당 보좌진이 재임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는 게



면직 보좌진 매년 10%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

야근·주말·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

“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고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도 공론화,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해고 과정이 너무 간소, 용이하다. 어떤 제동 장치도 없다는 의미다. 해고가 결정되면 해임안 양식을 뽑아 해당 의원 도장 찍고 사무처에 팩스로 보내면 끝이다. 물론, 이후 공무원 신분증 반납, 퇴직금 정산 등의 사후 과정은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좌진이 실질적인 면직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원실 내에서 국회 의원 말은 곧 법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게다가 의원들의 해고 행위는 법망을 벗어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중 보좌관, 비서관은 국회의장이, 비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명 요청서 또는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 사무처가 보좌진을 행정적으로 임명, 면직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입김이 직접 작용할 수 있으며, 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좌진의 고용 유지를 위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국회의원의 의사가 곧바로

반영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 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심사 절차 등 겹겹이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회에는 300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이 통용된다. 2700명의 직원은 주어진 그 어떤 일도 해낸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법률적으로는 하루아침에 해고돼도 어쩔 수 없이 응해야만 하는, 생계를 위협받는 별정직공무원일 뿐이다.

한 보좌진의 하소연이자, 2700명 보좌진의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늘 야근, 주말 출근이 일상이며, 쉬는 날에도 핸드폰을 결코 손에서 놓지 못한다.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해도 어느 날부터 누군가는 국회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안

다. 의원 눈 밖에 나서 잘렸다는 것을.”

이 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7월 직권면직의 경우 보좌진에게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토론회에서 “보좌진은 정치 현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로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법안은 보좌진들의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정작 본인들의 법은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오신환 후보도 당시 의원 시절 토론회에서 “보다 합당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사막에도 꽃은 핀다

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이직 돕고 국감맨 출근 편의 봐줘
고용 보장…보좌진協 활동 권유도

B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 보좌관은 새 직장을 알아보기로 했다. A 씨는 이직을 위해 의원실 업무를 쉬고 싶었지만 그만두겠다는 말을 선뜻 하지 못했다. A 보좌관이 없으면 의원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A 보좌관은 고민 끝에 B 의원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용기를 내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A 씨에게 B 의원은 뜻밖의 말을 건넸다. 오히려 그만두지 말고 남은 연차를 써서 새 직장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A 보좌관은 B 의원의 배려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시나 과한 업무가 따라오는 의원실도 있지만 노동법 준수는 물론 배려가 넘치는 의원실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이직을 준비하는 보좌진에게 새 직업 추천까지 해준 의원도 있었다. 별정직공무원임에도 쉽게 해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례도 나왔다.

C 의원실 출신 D 비서관은 보좌진 협

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C 의원과 면담을 하게 됐다. C 의원은 D 비서관이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고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D 비서관의 적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직업을 추천하기도 했다. 덕분에 D 비서관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됐다.

부득이하게 업무가 몰릴 때 보좌진들에게 선처를 베푸는 의원도 있었다. E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처럼 의원실 업무가 많아 보좌진이 야근하면 다음 날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보좌진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 함께한 의원도 있었다. F 의원은 한 번 연을 맺은 보좌진을 쉽게 해고하지 않아 의원실 보좌진들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했다. 길게는 24년까지 함께한 보좌진도 있었다. 의원실 업무를 넘어서 보좌진 협의회 간부 활동까지 배려해준 의원도 있었다. 보좌진 협의회 간부 H 보좌관은 의원으로부터 1년 동안 의원실 업무가 아니라 협의회 활동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었다.

박준상 기자 jooon@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러먹기만

9명. 1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실에 고용하는 보좌진의 숫자다. 별정직공무원인 이들은 4급 보좌관부터 9급까지 임용된다. 의원실 별로 분위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까닭에 근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게 사실이다. 근무평가에서 의원실 분위기를 가르는 것 중 하나는 가장 높은 직급 보좌관의 입김이다. 고위급 보좌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업무는 바로 의원의 ‘심기 보좌’란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다. 이른바 의원 심기 보좌를 잘 하는 보좌관이라면 의원의 신뢰를 얻는데 제일 순위다 보니 이들이 직제 아래 보좌진에게까지 원활한 소통이나 합리적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리어 독단적으로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의원은 차등은 있지만, 살아온 경력으로 평가받아 국회에 입성한다”며 “반면 입직 기준의 저항이 낮은 보좌관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도 ‘심기 보좌’만으로 의원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보좌관이 다른 보좌진의 ‘공적 가로채기’를 하는 것이 제일 흔하다. 정도의 차이일 것”이라며 “보좌관

의원 ‘심기 보좌’ 업무 중시 보좌관
공적 가로채고 사적 일 ‘비밀비재’
女보좌진에 함께 TV시청 괴롭힘도

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능력 없는 보좌관들이 적체된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드 프로세서 등 컴퓨터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디지털 국회 혁신이 화두가 되는 마당에 대신 타자를 일일이 쳐달라고 하는 것도 갑질일 수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C 의원실 D 비서관은 “오후 6시에 초안을 만들어 10시에 밥 먹고 온 보좌관에 보고한 뒤 수정한다. 11시에 다했는데, 보좌관이 자고 있다. 오전 2시에 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한다. 보좌관이 ‘내일 보좌’고 하면 다음 날 오전 7시에 출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새벽 2시, 3시까지 야근하는 게 보좌진의 예사”라고 말했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보좌진의 재택근무를 권고해도 보좌관이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E 의원실 F 비서는 “나이 많은 남성 보좌관이 여성 보좌진한테 ‘내 말 안 들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중요한 일을 안 주고 자질구래한 일을 시킨다. 다음날 밤 늦게 술 마시자며 퇴근 못 하게 하고 ‘펜트 하우스(저녁 드라마) 같이 보고 가라’고 강권하는 사례도 최근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보좌관이 여성 보좌진을 성폭행해도, 여성 국회의원이 해당 보좌관을 징계하지 않고 사실상 두둔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의원 한 명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보좌진에 어떠한 갑질을 해도 상관없게 되는 무방비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별정직 공무원도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보좌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며 “특히 여건이 비교적 더 어려운 4급 미만 보좌진 역시 (노동조합) 조직 대상으로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보좌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40만원 빌려 이자만 월 100만원”… ‘일수꾼’ 활개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남성·30대) 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업체 A로부터 40만 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는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했고 소액은 괜찮다는 생각이었다. 김 씨의 초기 변제액은 70만 원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이를 다 갚지 못했고 이자 명목으로만 30만 원을 갚았다. 그 이후에도 전액을 내지 못한 김 씨는 이자로만 한 달 새 총 100만 원을 지불했다. 연 이자율만 2000%가 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악탈적 대출이다.

‘살인적 이자’에도 제도권 대출 어려운 저신용자들 급전 창구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작 10%…대부업 시장 보완하기엔 무리

등록 대부업도 ‘일수’ 등 소액대출 업무, 합법수요 전환해야
법정금리 인하로 대부업 개선 효과… ‘소액·단기’ 대출 외면

김 씨는 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지만, 이처럼 연 이자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는 눈에 띄는 정도로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김 씨처럼 주수(週收·일주일마다 갚는 대출)뿐 아니라 일수(日收·하루마다 갚는 대출)가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에선 현행 법정금리는 가볍게 초과하고 만다. 김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범주 안에선 한 달에 1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현실적인 거래 수수료를 고려해도 ‘일수’ 시장은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법 사금융의 ‘일수꾼’이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일삼고 있다. 소액의 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개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이거나, 기대출 규모가 상당한 경우다. 등록 대부업체는 차지고 미등록 불법업체도 이들에게선 ‘상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월변이나 급전도 이들 시장에선 꽤 신용도가 높을 경우이나 취급된다.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단기 상환을 약속할 수 있는 ‘일수’가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이 시장에선 채무자와 채권자가 비공개로 매칭되기에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주로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선 “보통 50만 원을 빌리면 8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개 일수는 선 수수료 5%를 떼가고, 나머지를 상환 일정에 맞춰 금액을 균화한다. 하루마다 이자를 받는 구조기에 보통 연 이자율 500%를 가볍게 초과한다. 법정 최고금리의 숫자가

무색할 정도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몇천 원 받자고 일수营업을 할 등록 업체는 없다”라며 “이쪽 수요는 불법시장에서만(충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햇살론 ‘정책금융’도 그림의 떡 =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감당하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대출(26.0%)이었다. 서류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15.7%로 조사됐다.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수’를 사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들 시장을 억제하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일수 시장은 수요는 여전히 방대한 데 반해 이를 충족해 줄 ‘합법’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대출 정책의 벽을 낮추고 공급량을 확대해도 이 시장을 전부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등록 대부업체마저도 대출을 거절당한 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부모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미등록 사금융업자를 이용했다. 일수의 일부분을 등록대부업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



정부가 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최고금리 인하이다.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도 신용대출 영업을 줄이면서 서민들의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변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문에서 “공공대출은 대출 규모도 적고 대출조건이 엄격해 쉽게, 적기에 대출받기가 어렵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일수를 등록대부업의 업무로 끌어들이 불법수요를 합법수요로 전환하는 것은 유용한 수요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달금리 보완無… ‘소액·단기’ 대출 외면 =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다른 요소에

선 변인이 된다. 대부업 시장의 체질 개선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소액 대출 시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금융협회가 대부금융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 이후에 대부업체 규모가 양극화됐다. 자본금이 큰 회사는 작은 회사를 흡수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소액 위주의 대출을 하던 규모가 작은 대부업은 문을 닫았다. 올 하반기 금리가 20%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다수의 공급자는 금리 인하시 대출을 중단하고 인력을 감축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소액 대출을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금리 기준이 높아 그나마 수익성이 높았을 때는 레버리지는 키우는 방법으로 사업성을 감당했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은행처럼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점차 규모가 크거나 신용도가 안정된 대출을 선호하는 추세가 됐다. 특히 금리 수준이 내려가면서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로 선화하면서 소액

대출 수요자가 대거 탈락한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부업도 금리 인하 이후에 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도산이 줄을 이었다.

일수 등의 소액 대출이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배경에는 등록 대부업체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은 18~19% 선에서 결정된다. 제1 금융권에선 돈을 빌려오지 못하는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공모사채의 발행도 금지돼 있어 비용절감이 쉽지 않다. 여기서 5~6%의 비용이 들고 대손비용으로 10%가 지출된다. 광고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고려하면 10% 후반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일본 대부업계는 은행 차입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는 연 1%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은 원래부터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위주의 대출이 많다”면서도 “더 적은 금액의 경우 업체가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 여전히 ‘숨방망이’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 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를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서 벌금 상한을 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무등록·무면허 위반도 처벌 규정을 종전보다 벌금 상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와 일본 등과 비교해 처벌조항이 엄격하지 않다. 무등록 영업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와 일본에선 처벌 상한이 한국(개선 이후)보다 3~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4배 높다.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주수 등의 상환금리를 차등화해, 이를 등록대부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수수료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시장 위축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대안도 존재한다. 일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소금융재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인회와 3자 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한도도 상인회마다 설정하고 상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 수익금은 상인회가 수취하고 이는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돼 부실을 관리한다.

이후 수백%까지 달했던 시장의 일수 금리는 10% 미만으로 내려갔다. 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일수업자들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가 됐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대출 상환율도 동시에 상승했다.

이 방식은 상인회가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기에 기존 정책대출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 강점이 됐다. 정책자금의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단계를 상인이 아닌, 상인회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완된 것이다.

이는 기존 시장의 유연함과 정책의 자금 지원이 긍정적으로 맞물린 사례다. 다만 전통시장이라는 연대 조직이 있기에 가능했다. 여전히 일용직이나 무직자 등은 파편화돼 있어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공급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외연확장 필요한 때…내가 게임체인저”

인터뷰 오신환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원에서 싸움이 중요하다는 외연 확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아닌 본인이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 후보는 그래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는 파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게임체인저’라고 지칭한 오 후보는 향후 토론을 통해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성에 기반을 둔 소통과 공감. 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요소다. 그는 “(나와 같은)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가진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다”며 “모든 사안에 당사자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세대들은 이념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정책도 이념으로 알아본다”며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특히 청년층의 삶에 공감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반아파트 제도와 창업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반반아파트 제도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통해 자산 축적을 도와 일종의 주거 사다리를 놓는 정책이다. 집을 얻기 힘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해주고 집을 팔 때 차익의 절반은 서울시에 돌려주되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창업 도시 조성에 대해선 “단순히 땅을 파헤치는 도

‘97세대’ 공감능력으로 소통할 것
저출산 방지에 모든 예산 쏟아부어야
반반아파트·창업도시 조성도 약속
민주당과 대화·협업…현안 해결을

시개발이 아니다”며 “입체 도시 안에서 일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바꿔내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히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응하는 정책도 내놔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72명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보다 낮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일자리·저출산 대책 실패가 낳은 대재앙”이라며 “저출산을 막기 위해 모든 예산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이 경력단절에 있다며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80%로 늘리

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과도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와 구청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수 차지하는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민주당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뭔지 찾아야 해결이 나온다”며 “정치력도 다 공감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와 협업을 위해 접점이 가장 넓은 현안부터 해결해나갈 전망이다.

‘게임체인저’라는 별칭은 오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서며 스스로 붙인 별칭이다. 나경원·오세훈 후보를 이길 새 인물이라는 뜻이다. 아직 오 후보는 판세를 바꾸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남은 토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정책이나 콘텐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대 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게임체인저’로 지칭하면서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원에서 싸움이 중요하다”며 “외연 확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동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대·오영훈·이용우 의원, 문성현 위원장, 이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당정, 추경규모 15조 안팎 조율
4차 재난지원금 이번주 윤곽
직원 채용시 보조금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400만~500만 원을 그룹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달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한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추경안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1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 방안 유력 검토
- 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 모색
- 3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 유력 검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전체 추경 규모 15조 원 안팎에서 당정간 조율될 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제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3차 지원에서 빠진 5~9인 종사자 개인·법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도 4차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 원 선이 거론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

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도 지원이 유력하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논의를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대책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화이자 백신 26일 국내 도착

하루 확진 416명…직장 감염 확산
방역당국 “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직장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다. 방역당국은 확산 추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16명 증가한 8만69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391명, 해외유입은 25명이다. 확진자 발생은 줄었으나,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감소하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면 확산세가 둔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검사 건수는 4만4289건으로 평소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성남 시 저축은행, 안산시 제조업체,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충북 청주시 자동차부품업체(총 13명)와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 등에

서 확진자가 추가되거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의료·종교시설과 체육시설, 가족·지인모임 등 기존 감염경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는 17일 이후 전날까지 20명이 추가됐다. 이 중 10명은 국내발생으로, 경기 여주시와 시흥시 집단감염 사례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일은 아침’에 출연해 “일시적으로 집단발병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주 중반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단계를 조금 상향 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26일 한국에 도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與,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어서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한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

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조율을 이유로 오는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노영민 “MB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인 듯”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불법적 행위가 권력에 의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노 전 실장은 “핵심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H5N8형 조류AI, 러시아서 첫 인간 감염

가금류 농장 노동자 7명서 확인
“경미한 증상 보였지만 모두 회복”
러 연구소, 키트·백신 개발 착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힘겨운데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의 안나 포포바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병원성의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며 관련 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냈다고 밝혔다.

포포바 청장은 “감독청 산하 국립 바

이러스·생명공학 연구센터인 ‘벡토르’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12월 가금류 사원에서 AI가 번졌던 러시아 남부의 한 가금류 농장 근로자 7명에게서 AI 바이러스 A형 아형인 H5N8 유전자 시료를 분리했다”며 “이는 인간에게 감염된 세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7명 감염자 모두 경미한 증상을 보인 뒤 회복해 현재 건강한 상태”라며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취해져 위험은 최소화했고 추가 상황 전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로 H5N8 바이러스가 가금류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은 전 세계가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해 적시에 검사 시스템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벡토르 연구소는 이날 H5N8형 AI에 대한 인체 진단 키트와 백신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유럽, 중국과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H5N8형 AI 발생이 보고됐지만, 그동안은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서만 발생했다. 앞서 벡토르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H5N8형 AI가 러시아 15개 지역에서 돌고 있지만, 인간에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간이 감염됐던 AI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러스에 전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했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조리된

식품을 먹으면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프랑스 농업부는 AI 발생이나 예방 조치로 1월 말 현재 200만 마리 이상의 오리과 기타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보고했다. WHO는 “A형(H5) 바이러스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와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며 “그러나 이들 바이러스는 인체에 심각한 질환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에서 2013년 H7N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이 최초 보고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 해 144명의 감염자 중 46명이 사망했다. H5N1과 H9N2, H5N6도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얀마 군경, 시위대에 ‘실탄 사격’ 4명 사망… 美·EU ‘유혈진압’ 규탄

미얀마 군부와 경찰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군과 경찰 수백 명은 이날 오전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의 조선소에서 쿠데타에 항의해 파업한 근로자들과 대치했다. 군 저격수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 수백 명이 몰려나와 항의하며 퇴각을 요구했고, 군경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며 최소 10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새총을 쏘거나 돌맹이를 던지자 군경은 곧바로 고무탄과 최루탄,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에서는 최소 2명이 사망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가슴에 총을 맞은 36살 남성과 머리에 총을 맞은 10대 소년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서 3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날 밤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민간 자경단원 한 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 반대 인사 야간 납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자경단을 구성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이 자경단원은 통행금지 시간 이후 배회하는 차량을 잡고 검문하다가 이 차 안에 있던 경찰의 총을 맞아 사망했다.

앞서 수도 네피도에서는 9일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실탄을 쏘는 현장에 있던 20세 여성 카인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그는 19일 숨졌다.

이라와디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유



美 민가 덮친 항공기 잔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 주택가에 여객기 기체 파편들이 떨어져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를 향해 날아가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고장나면서, 공중에서 비행기 파편들이 인근 주택가 여러 곳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브룸필드/AFP연합뉴스

혈진압으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군부는 일주일째 야간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1일 쿠데타 이후 20일까지 569명이 군정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트위터로 “누구나 평화적인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며 “미얀마에서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림 기자 rog@

텍사스 한파 ‘중대재난’ 바이든 “피해복구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한파와 겨울 폭풍에 따라 막대한 인적·재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 △주택 수리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 열어붙은 겨울 한파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피고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방문이 되레 부담을 줬 텍사스주 당국의 피해 복구 작업에 걸림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당초 다음 주 초로 잡았던 방문 계획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

앞서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텍사스주 방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주 중반에 (텍사스주) 가는 것으로 계획했었지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혹독한 겨울 한파가 시작된 이후 텍사스주 등지에서 최소 5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저체온증 △병균질 추돌 사고 △낙상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원인이었다.

특히 대규모 정전사태가 겹친 텍사스에서는 20명 이상이 이번 겨울 한파의 여파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온 저하에 따른 난방 사용 증가·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풍력 발전 설비의 동결이 겹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추운 날씨를 견디고자 차량·프로판 가스·백난로 등 대체 난방재를 찾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밀폐된 차고에서 자동차를 켜거나 실내에서 가스 등을 사용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사고 등으로 숨졌다.

다행히도 이후 한때 450만 가구에 달했던 텍사스주의 정전 상황은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전날 전력 시스템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COVER STORY

몸속의 숨은 권력자 ‘호르몬’

- PART 1 다시 젊어지고 싶은 당신, 호르몬에 길이 있다
- PART 2 호르몬으로 사랑 읽기
- PART 3 처진 피부와 나잇살 잡는 ‘청춘호르몬’ 관리법
- PART 4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
- PART 5 시니어로 가는 사다리, 경년기
- PART 6 시니어가 알아야 할 호르몬 질환 10



전통 정원의 멋
77세 노인이 지은,
좀 기발한 ‘별서’

신라보가 만난 사람



나만의 멋을 찾는 여정
모델 에이전시 대표 알렉스 강



미쳤다는 소리 솔하게 들었지만
산골로 귀농한 허진영 씨



생활 속 법률 상식
나홀로 소송 시
대처법
구해줘 부동산
2021
부동산 트렌드



시니어라이프
리더의 품격



스타일링
상큼한 그레이
패셔니스타가
되려면
텔스+
에스트로겐
제대로 알자



감성 솔솔! 미술관 여기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슬기로운 연금생활
내 연금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초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 기회는 연리지홈

적은 돈으로 빠르게 내 집 장만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처음 살 땐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사고
20~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없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HOME

-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2028년까지 서울에 1만 7천호 공급
-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의 80%내외 X 지분율 20~40%로 저렴 분양
- 4년마다 형편에 맞게
4년마다 15~20%씩 형편에 맞게 지분 추가 획득
- 처분 자유, 언제든지 매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분전체 제 3자에게 매각가능
- 장기 보유, 자산형성 지원
처분시점의 지분비율대로 금액분할

SH의 [생애주기별] 신개념 주택정책 브랜드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청년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체계 구축

2030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신호 SMART HOUSING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움 청신호
2030세대 청년창업가	ablalab 에이블랩	청년 창업지원 도전속 시즌2 에이블랩
3040세대 무주택세대	연리지 HOME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5060세대 노후세대	누리재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연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SH가 연리지의 가지처럼 함께하는 정책임을 표현

 연리지
HOME

화성 탐사 ‘新스타워즈’… 생명체 흔적 찾아낼까

美, 탐사로버 착륙 성공…2년동안 미생물 흔적 확인 등 임무 이달 도착한 UAE·中 탐사선 포함 총 8대 화성 궤도 도는 중 인류 탐사 가능한 유일한 행성… 美, 2030년 유인 탐사 계획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로버(이동형 탐사로봇) 퍼서비어런스호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면서 화성 탐사의 신기원이 열렸다. 이달에만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이 연달아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안착시키는 등 화성은 전례 없이 붐비고 있다.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유인 탐사 기대에 전 세계 인류의 눈이 쏠렸다고 미국 CNN방송이 소개했다.

퍼서비어런스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5시 55분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해 착륙 때 공기 저항이 거의 없다. 따라서 탐사선이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추락할 위험이 크다. 화성과 지구 간 약 2억km에 달하는 거리 때문에 양방향 통신에 22분의 시차가 있어 모든 착륙과정은 탐사선 스스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탐사선이 화성 대기에 진입한 뒤 착륙하기까지의 시간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른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서 앞으로 최소 2년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예제로 크레이터’는 30억~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 분자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암석과 토양은 추후 발사될 로버가 수거해 2031년 지구로 돌아온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소형 헬리콥터 인저뉴어티는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인저뉴어티가 비행에 성공하면 지구 밖에서 날아오른 최초의 비행체가 된다. NASA는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잔인하게 추운 화성의 밤을 견디면

비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화성 궤도를 도는 탐사선은 미국(3대)과 유럽(2대), 인도(1대), 중국(1대), UAE(1대) 등 총 8대다. 이 중 UAE와 중국은 각각 이달 9일과 10일 아말과 텐원 1호를 화성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달에만 탐사선 2대와 착륙선 1대가 화성에 도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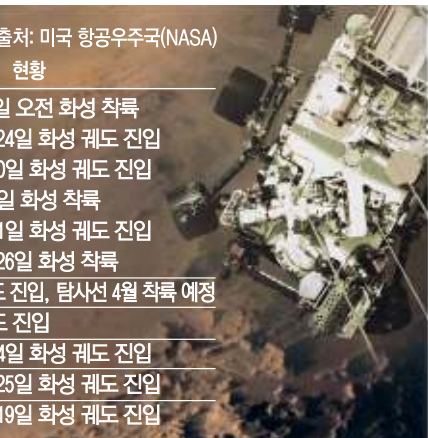
화성이 갑자기 붐비게 된 이유는 지난해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각국

화성 탐사 현황		※ 출처: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가	탐사선 명칭	현황
미국	퍼서비어런스	한국시간 19일 오전 화성 착륙
	2001 마스 오디세이	2001년 10월 24일 화성 궤도 진입
	마스르네상스오비터	2006년 3월 10일 화성 궤도 진입
	큐리오시티	2012년 8월 6일 화성 착륙
	메이븐	2014년 9월 21일 화성 궤도 진입
중국	텐원 1호	2018년 11월 26일 화성 착륙
아랍에미리트	아말	10일 화성 궤도 진입, 탐사선 4월 착륙 예정
인도	망갈리안	9일 화성 궤도 진입
유럽	마스 익스프레스	2014년 9월 24일 화성 궤도 진입
러시아-유럽	엑소마스	2003년 12월 25일 화성 궤도 진입
		2016년 10월 19일 화성 궤도 진입

미국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18일(현지시간) 화성에 착륙하기 직전의 모습. UPI연합뉴스

이 일제히 탐사선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지구와 화성은 공전주기 차이 때문에 26개월을 주기로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골든 타임’이 온다. 이때를 놓치면 더 먼 거리를 가야 하거나 다음 골든 타임을 기다려야 한다. 아말과 텐원 1호, 퍼서비어런스는 모두 지난해 7월 발사됐다.

각국의 우주 탐사선이 물리게 된 이유는 화성이 인류가 탐사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이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은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 착륙선이 오래 버틸 수 없다. 지금까지 금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지만, 착륙선은 127분을 버티고 신호가 끊겼다. 반면 화성은 2001년 착륙한 탐사선이 아직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2030년대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 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퍼서비어런스가 이번엔 수행할 임무에는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해 로켓 추진 연료와 산소 호흡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산소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인간은 화성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구로 귀환도 가능하다.

화성이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으로 꼽히는 것도 우주 경쟁을 자극한다. 화성에는 과거 물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이 다수 존재한다. 물의 존재는 생명체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나사는 “액체 상태의 물 외에도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외에 에너지원을 찾는 임무도 미래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림 기자 rog@

“우주에 살어리랏다”… ‘기지 건설’ 연구 활발

인간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 의한 달이나 화성의 도시 만들기 구상도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달이나 화성의 환경은 당장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물과 공기의 확보, 방사선 대책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소개했다.

냉전 시대 종식 이후 한동안 시들했던 우주 탐사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중국이 ‘우주굴기’를 내걸고 우주탐사 최강국인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더니, 최근

방사선 노출량 지구 200배
운석도 그대로 떨어져 위험
표면보다 ‘지하기지’에 무게
물 재활용·식량 생산 연구도

들어서는 터키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새롭게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국가들도 등장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달과 화성에서 인류가 거주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일례로 달의 경우에는 대기와 자기장이 없

어 방사능 노출량이 지구 표면의 200배에 달한다.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질 때는 대기와의 마찰로 다 타버렸던 지구와는 달리, 그대로 달 표면에 충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방안이 지하에 달이나 화성의 기지를 세우는 것이다. 기존 구상은 달에서 기지를 만들 때 방사선이나 운석의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외벽을 달 표면 입자인 레골리스로 덮는 것이었다. 문제는 레골리스를 견딜만한 강한 구조물을 건조하려면 중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지구에서 많은 기재를 운반해야 한다. 그래서 주목을 받은 것이 달과 화



화성 유인기지 상상도. 사진제공 NASA

성에 있는 동굴이다. 달과 화성에는 깊이 수십~수백m의 세로 구멍에 바닥에서 가로로 긴 동굴이 많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은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 동굴 안에서 방사선의 방사능 노출량이 달 표면의 10분의 1 이하로 억제되는 것을 밝혀냈

다. 도쿄이과대와 JAXA 등은 이러한 굴에 설치가 적합한 기지 개발에 임하고 있다. 수지로 코팅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소재의 대형 텐트는 공기를 불어 넣으면 접은 상태에서 3분 정도로 완성된다. 연결하면 기지를 확대할 수도 있고, 접으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가벼워 지구에서의 운반도 간단하다.

달과 화성에서 살게 될 인류를 위한 물 재활용과 식량 생산 기술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은 70% 정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JAXA는 자외선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을 채용해 이 비율을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음식 쓰레기나 대변 등을 처리해 식물 재배에 필요한 탄소와 질소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연구 중에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www.hauri.co.kr

“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180회 늘린다

디지털금융 리스크 커져 종합·부문검사 793회 계획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원격 비대면 검사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아졌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금융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축소됐던 검사는 지난해 613회에서 180회(29.4%) 늘려 올해 793회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인

원은 지난해 대비 66.6% 증가한 2만3630명이다.

지난해 7회(3314명) 진행했던 종합검사는 올해 16회(5134명) 늘리기로 했다. 부문 검사도 지난해 606회에서 171회 늘려 올해 777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 자료를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신규 편입 검사대상

에 대해 상시검사를 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코로나 中企·자영업 대출 80조 은행권, 5~10년 분할 상환 제안

9월 이후 '연착륙' 강조 이자 못 내는 깡통기업 돕는 '무조건적 이자유예' 부정적 이번이 마지막 재연장 호소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해 준 대출 규모가 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거나 5년 이상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등의 방식이라도 적용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계약정보 포함) 잔액은 모두 73조2131억 원(29만7294건)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금융당국·은행연합회 보고 수치는 5조 원대지만, 이는 전산 시스템상 대출 담당 직원의 '면책' 대상으로 등록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면 15조 원대라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6조4534억 원(9963건)도 받지 않고 미뤄졌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455억 원(4086건)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 규모는 79조712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이자 유예액은 455억 원 뿐이지만, 이 이자 뒤에는 무려 1조9635억 원의 대출 원금이 있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약 82조 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껴안고 있는 셈이다.

3월 말 대출 연장·이자 유예 시한이 다가오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 19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을 잇달아 만났다. 오는 22일에는 은행연합회장 등

5대 시중은행 만기연장 대출 규모 (단위: 원)



금융협회장들과 회동한다. 각 회의 후 금융위는 "참석자들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 원금 만기 재연장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무조건적 이자유예'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환 능력을 따져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엔 연명치료를 의존하는 한계기업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실무진은 이자 유예 기업의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같이 갚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합쳐진 원리금이나 밀린 이자만 따로 5~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방법 등을 재연장의 보완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3월 말 이후 이자유예는 신규 신청 기업에만 적용하고, 지금까지 이자를 미뤄준 기업들의 경우 밀린 이자를 일단 한꺼번에 내야 다시 유예해주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코로나19 관련 재연장 취지에 맞지 않아 금융당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의견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직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확정적으로 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재연장부터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6개월 이후에는 꼭 실행돼야 할 대출 연장·이자 유예 관련 '연착륙' 방안들"이라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전자금융거래법 놓고 한은·금융위 '감정싸움'

금융위, 전자거래정보 수집 추진 한은 "지급결제 관리, 우리 업무" 은성수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입법발의가 이뤄진 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이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는 소위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사고가 있을 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무계중심은 한은 쪽에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개최된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도 결국 한은까지 금융위 밑에 두겠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실제 2019년 2월 금융위 관계자는 "헤드쿼터(HQ·본부)는 금융위다. 거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한은이나,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결제원은 손발일 뿐"이라며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결제원은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한은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양 기관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나온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작년 11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지급결제청산법에 관한 조항에 문제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싹쓸현상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을 위주로 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기능을 높이도록 유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가 있다. 지급결제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는 중앙은행의 핵심 고유기능"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엔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각각 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와 정부위에 상정됐다.

감정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윤관석 의원이 최근 이주열 총재를 향해 뒤통수를 맞았으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윤 의원은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전금법 취지는 전면 개정안에 가까울 정도다. 지급결제만 쟁점이 돼 안타깝다. 이점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지급결제업무를 주도하려는 시도가 알려진 것은 2019년 2월 25일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은 출신이 아닌 인사로는 처음으로 결제원장에 앉은 것도 계기가 됐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우리금융 디지털 인재육성 특성화고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

우리금융그룹은 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디지털·IT 기술 학습을 위한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성화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지원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KB·기보, 한국판 뉴딜 지원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판 뉴딜 기업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19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기술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비용과 보증료율을 우대해 총 5000억 원 보증서를 공급한다. 허인(오른쪽) KB국민은행장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정부24



유효기간 없는 평생인증 KB모바일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220호(2021.02.03), 광고물 유효기간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두산 '로봇·드론' 미래사업 투자 '그룹 재건' 드라이브

DMI, 두산로보틱스 이어 45억 규모 유상증자 단행

향후 두산그룹을 이끌 계열사로 평가받고 있는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 두산로보틱스가 최근 연이어 유상증자했다.

그룹의 자금 조달 작업으로 기존 핵심 계열사들이 매각된 만큼 하루빨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산은 그룹 명맥을 유지하고자 DMI, 두산로보틱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두산에 따르면 DMI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4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에는 100% 지분을 보유한 ㈜두산이 참여한다. 출자 주식 수는 9만 주이다. 주당 가격은 5만 원이다. 두산로보틱스도 3일 (주)두산의 참여 아래 45억 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2019년 이후 무려 2년 만에 이뤄진 유상증자다.

협동로봇을 생산하는 두산로보틱스, 수소드론 사업을 하는 DMI는 오래전부터 두산의 미래 핵심 계열사로 평가받았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수소 관련 사업은 각국의 초기 표준경쟁 단계부터 뛰어들이어야 한다"

핵심 계열사 매각 3兆 자구안 마련 그룹 경쟁력 악화·캐시카우 부재 협동로봇·물류배송 사업 속도전

며 "협동로봇 사업은 물류, 서비스업으로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가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는 사업 역량을 빨리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탓이다.

두산그룹에는 현재 확실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가 없다. 3조 원 자구안 마련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를 팔았기 때문이다.

매 분기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은 남았다. 하지만 두산밥캣 홀로 두산그룹을 지탱하기는 역부족이다.

DMI, 두산로보틱스가 설립된지 각각 5년, 6년이 됐음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쳤다. 두 회사는 2019년 각각 129억 원, 148

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로 흑자 전환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DMI와 두산로보틱스는 캐시카우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DMI는 수소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사업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사업 영역을 지상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 로봇 전문기업과 손을 잡고 소방현장에 투입될 수소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제품군을 지속해서 늘린다. 작년에 출시한 H시리즈는 현존하는 협동로봇 중 가장 무거운 중량(25kg)을 운반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공개한 A시리즈는 국제 시험인증 공인기관인 티유비이슈드가 시행한 안전성능 수준 평가에서 최고 레벨을 얻었다.

두산로보틱스는 작년에 발간한 CSR 보고서에서 "2023년까지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의 10% 수준인 1만5300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그룹 이끌 미래전략 계열사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

유상증자 규모: 45억 원

사업 내용: - 전 세계 유일 수소드론 이용 물류배송 사업화,
- 중국 기업과 손잡고 소방현장 투입될 수소로봇 공동개발

두산로보틱스

유상증자 규모: 45억 원

사업 내용: - 협동로봇 개발, 현재 10개 모델 양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마케팅부터 판매까지 '온택트'

LG전자 '위드 코로나' 승부수

기존 전시업무 담당 팀명 변경 CES 2021서 가상전시관 선포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 확대

LG전자가 마케팅부터 판매까지 전 분야에 걸쳐 온라인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온택트(On-tact·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연결'을 더한 개념)'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선택이다.

2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기존 전시 업무를 담당하던 HE마케팅커뮤니케이션2팀의팀명을 브랜드 익스피리언스(Brand Experience·브랜드 경험)로 변경했다. 업무도 고객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도를 아우르는 식으로 확장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오프라인 전시회가 없자 시피 했고, 온라인으로의 추세 변화가 두드러지다 보니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효과적인 온택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선택으로 분석된다. 특히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본부의 경우 이러한 전략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됐다.

TV는 제품 특성상 눈으로 직접 봐야 화질 차이를 비롯한 특징점을 고객



권봉석(사장) LG전자 CEO가 지난달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CES 2021' 프레스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에게 드러낼 수 있는데, 상황상 비대면·언택트·온택트 마케팅만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전자는 오프라인 전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전시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부터 시작해 올해 초 열린 최대 가전·IT 전시회 미국 CES 2021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3D 가상전시관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최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고자 했다.

판매와 유통 차원에서도 온라인 중요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특히 급속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LG전자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5%까지 올랐고, 하반기엔 30%까지 경증 뒀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 방산 계열사, 중동·아프리카 시장 정조준

'IDEX 2021' 전시회 참가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1' 전시회에 참가한다.

IDEX는 격년으로 열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60여 개국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화 방산 계열사는 '국방 로봇 존'과 '지상 장비 존', '방산전자 존' 등으로 구성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동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군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방 로봇 존에서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과 차륜형 장갑차 탑재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가 해외 방산전시회엔 처음으로 실물 공개된다.

다목적무인차량은 민·군 협력과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4륜구동 전기 추진 방식의 국방로봇이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의 시범 운용에서 △원격주행 △병사자동추종 △자율이동 및 복귀 △장애물회피 등 다양한 무인 기술을 완벽히 입증했다.

방산전자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최첨단 함정전투체계(CMS)가 전시된다. CMS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되는 첨단 시스템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SPIDA COLLECTION CHRONOGRAPH WITH TACHYMETER SCALE
STAINLESS STEEL WITH IP GUN TREATMENT - WR 10 ATM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렌터카·웨딩홀·돌봄 서비스 ‘호갱’ 되지 마세요

소비자 정보 불균형 해소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부족한 정보로 소비자들이 불량품이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레몬 마켓’(저품질으로 유통되는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다. 겉은 괜찮지만 속은 너무 시어서 먹기 힘든 레몬처럼 직접 써보기 전까지 정보 부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레몬 마켓인 렌터카부터 요양 서비스, 웨딩홀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렌터카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앱) 카

카모아, 렌터카 435곳 후기 제공 웨딩북, 업체별 투명한 금액 장점케어닥, 검증 받은 요양시설 중개

모아’는 전국 단위 리뷰 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시장을 혁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시장에는 실제 사용자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 업체 후기를 찾기도 힘들었던 데다 가격 비교도 어려웠다.

카모아는 이를 혁신하기 위해 ‘트러스트 리뷰’ 서비스를 도입해 렌터카 이용 후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카모아는 전국 56

개 지역 435개의 중소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업체의 차량 상태, 업체 친절도, 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사용 리뷰는 2만7000여 건이 올라와 있다.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했던 웨딩 업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 ‘웨딩북’은 소비자 중심으로 결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시작한 웨딩북은 결혼 예산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부터 웨딩홀까지 결혼 예식에 필요한 전 분야를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웨딩북의 강점은 투명한 가격이다. 웨딩

북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업체에 직접 견적을 문의할 수도 있다.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에도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실버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다. 케어닥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이던 요양 서비스 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케어닥은 국가 기관 평가와 실제 사용자 후기를 통해 검증한 정보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시설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각 요양 업체를 비교하고 예산 및 건강 상태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요양 서비스를 찾아 준다. 실제로 이용해 본 보호자의 후

기부터 간병인, 요양보호사 프로필과 후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한, 간병인 비용 정찰제를 도입해 시간과 비용 정산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트업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욱 카모아 서비스팀 총괄 이사는 “기존 렌터카 시장은 고객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며 “카모아는 이를 해소하고 렌터카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리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가정·산업용 ‘완전 자동화 로봇’ 개발 매진”

인터뷰

정태영 플라잎 대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실현하고 싶다. 집에서의 설거지나 빨래, 병원이나 공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등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언젠가는 1가정·1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 시대를 만들고 싶다.”

21일 정태영 플라잎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엔지니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며 “손은 정밀하지만, 로봇은 정밀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을 AI를 적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9일 법인을 설립한 플라잎은 ‘Planning AI for’의 약자로 AI를 적용하는 모든 솔루션을 담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Planning AI for robotics’를 지향하지만, 최종적으로 ‘planning AI for mobile’ 등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물체 인식(눈) AI와 로봇 행동(팔) AI를 산업용(공장자동화) 및 협동(사람과 함께 작업) 로봇에 적용해 ‘완전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품화를 거쳐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등도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에는 산업용 및 협동 로봇을



정태영 플라잎 대표는 “산업용 및 협동 로봇에 시를 적용해 ‘완전 자동화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플라잎

감지 오류 등 안전 문제 대비 AI적용 로봇기술 끌어올릴 것 내년 판매...대기업과 협업도

다루는 기업이 거의 없다. 미국의 ‘코베리언트’와 ‘오사로’, 일본의 ‘무진’ 정도가 비교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상용화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 특별한 규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상되는 리스크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AI는 시간과 공간,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지만, 초창기 적용 과정에서 사람을 감지하거

나 정지 신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연컨대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내 로봇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산업용 로봇 창업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1위 수준이지만 정작 로봇 점유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국내 로봇 기업들은 해외 기술을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은 가장 많이 하지만 기술력은 썩지가 되는 상황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적용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산업용 로봇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통신사 맘대로 요금제 자동전환 못한다

방통위 “3회 이상 고지해야”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만 12세 또는 만 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된다. 하지만 오래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와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군인요금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고지 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동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유플러스가 장애인을 위한 ‘5G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 U+ 장애인 전용 ‘5G 복지 요금제’ 선포

영상·부가 통화 월 600분 제공

LG유플러스가 장애인을 위한 5G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5G 요금 시장에서 장애인 전용 서비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영상·부가 통화 제공량을 대폭 늘린 ‘5G 복지 55’, ‘5G 복지 75’를 신설했다 22일 출시한다.

수화로 의사소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화면으로라도 상대방을 만나볼 수 있도록 영상·부가 통화를 월 600분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5G 최고가 요금제인 ‘5G 시그니처(월 13만 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제공량이다.

5G 복지요금제는 기본적인 모바일 데이터 구성도 포함한다. 5G 복지 55는 월 5만

5000원(VAT 포함)에 12GB(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의 5G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5G 복지 75는 월 7만 5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 제한)로 구성돼 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쓸 수 있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요금기획담당은 “5G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요금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두 요금제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통신요금 25% 할인(선택약정), 가족결합 할인에 복지할인까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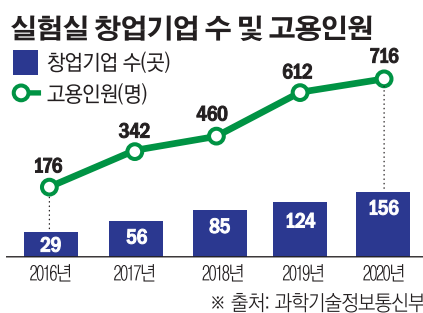
“실험실 창업 돕는다”… 과기부, 창업탐색교육 추진

한 달간 125개 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7개 권역에서 실험실창업혁신단(대학)과 시장탐색교육기관(국내 1곳, 해외 1곳), 125개 창업탐색팀을 선정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연계해 창업아이템의 잠재고객 발굴을 통한 사업화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창업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 교육을 이수한 319개 팀 중 156개 팀이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71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앞으로 5년간 창업탐색교육



및 창업보육을 전담할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을 신규로 선정한다. 특히 시장탐색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실험실창업혁신단이 속한 권역의 다른 대학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실험실창업혁신단이 이들 기관과 함께 시장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공계 창업탐색팀의 경우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약 28% 확대된 125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탐색팀은 사업화 모델(BM) 구축, 잠재고객 발굴·인터뷰, 아이템 수정·보완 등 창업에 이르는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최소기능제품 검증과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 시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의지가 높고 성과가 우수한 창업팀에 대해서는 창업 이후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해 시장 진입을 돕는다. 또 해외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팀에는 투자유치 방안과 아이템 수정 등 ‘해외시장 특화 멘토링’을 지원해 글로벌 창업에 대한 도약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 필립스·조셉 이〉

연대·한양대 교수 “위안부=매춘부” 램지어 옹호 파문

美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위안부 관련 기고문 공동게재
“학문적 성실성 공격은 비생산적… 공개 토론할 가치 있어”

국내 저명 대학교수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부교수와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On Comfort Women and Academic Freedom)’라는 제목의 글을 공동으로 기고했다.

이들은 해당 기고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과의 개인적인 연관성 때문에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성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외국인 혐오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자신들을 ‘한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 대해 비난이 아닌 토론을 촉구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의 글에 한국적 관점이 결여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동질적이면서 피해자 중심적인 ‘한국’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반대파를 ‘반한’ 또는 ‘친일파’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에서는 위안부 연구나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정치 집단의 사고로 조성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토론할 가치가 있었던 것들”이라고 적었다.

또 공개적으로 위안부 납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학자가 활동가들로부터 자주 괴롭힘을 당하거나, 자신들의 대학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예로 든 것은 2013년 ‘제국의 위안부’ 발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대 박유하 교수였다.

이들은 기고문 끝에서 자신들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두둔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적

시했다. 그보다는 한국의 학자이자 거주자로서, 철회나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사과가 아닌,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난이 아닌 토론을 하자는 이 기고문의 요지 자체가 그를 두둔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미 유엔과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역사에 대해 계약 관계 여부나 자발성을 따져보자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이 교수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학교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교육방송국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9년 수업 도중 “한국 역사학자들은 양적 연구를 활용한 것이 아니며, 5~10명의 최악의 사례에 주목해 전체 위안부를 일반화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거짓 말장미”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이 교수에게 문제제기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그의 발언을 규탄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변호선 기자 hsbhun@



때 이른 봄 날씨
수도권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17도 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연을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만취여성 모텔 데려가... 대법 “강제 추행”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인 상대방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씨를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채 외부로 거치지 않고 일행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모

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며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모텔 내 CCTV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공수처 출범 한 달 ‘순항’... 갈 길 먼 1호 사건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출범한 이후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이달 5일 100건을 넘은 뒤 보름 만인 19일 300건을 넘겼다.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체가 완성되기 전부터 사건이 몰렸다. 공수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305건 접수 이첩요청권 처리·인사 관련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요청권을 사건·사무규칙에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검사 등에 대한 공개모집이 흥행했지만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야가 추천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여야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당은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회계관리	기업연속관리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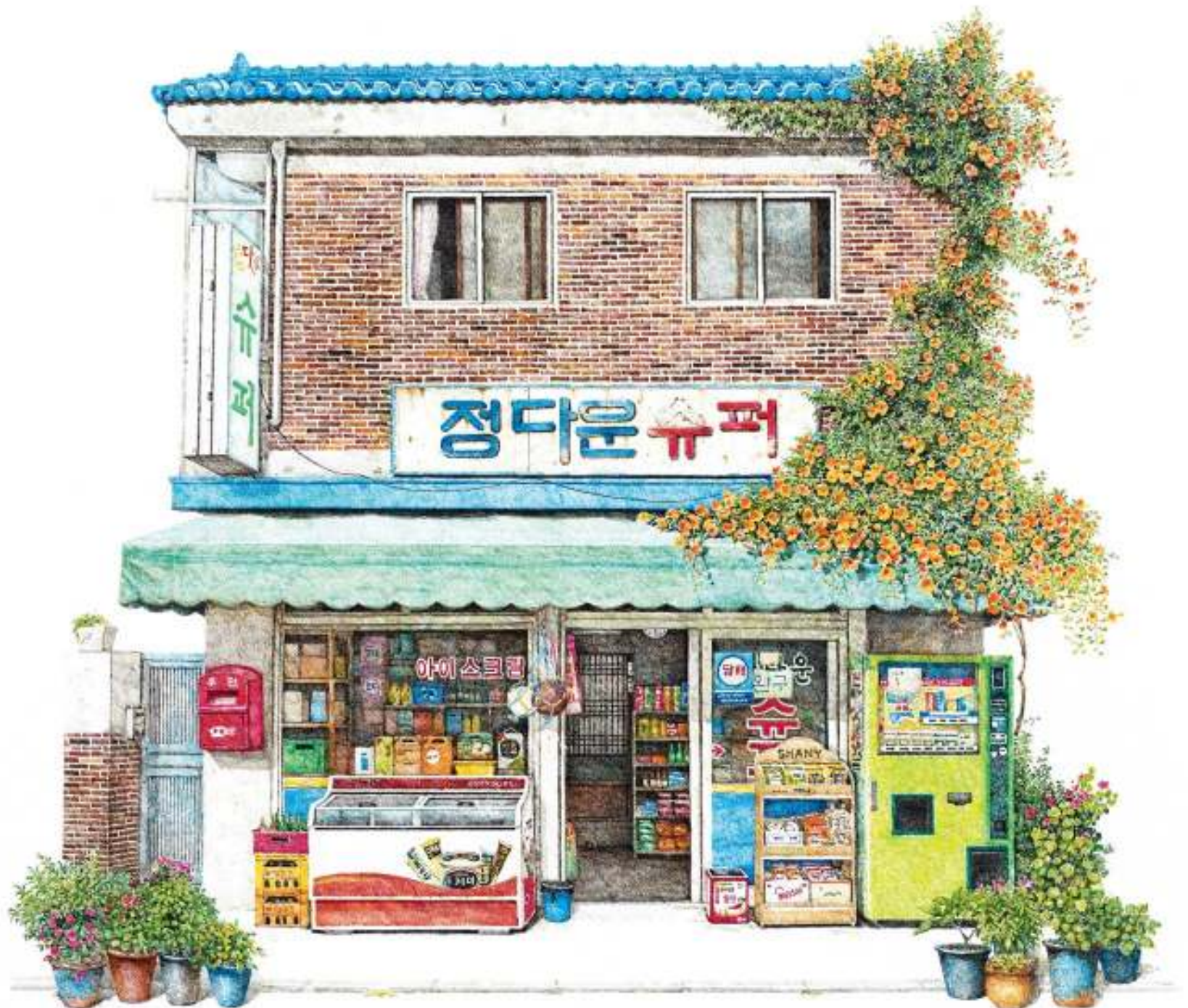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팀빌딩, 도메인)



늘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동네를 지켜온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낮엔 쉬어 가라며 길을 내어주고
밤엔 조심히 가라며 길을 비춰주던
그 가게들을,
이젠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지 및 상권, 고객 분석 | 세무관리 및 절세전략 | 소상공인 관련 법령 | 홍보 및 유통 판로 확장을 위한 마케팅 교육

※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법감사인 심의필 : 20202981(2020.10.12~2021.12.31)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반도체 업계 첫 ‘물 사용량 저감’ 인증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노력으로 반도체 업계 최초 ‘물 사용량 저감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소가 있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는 지난해 영국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2001년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방안의 하나로 설립한 친환경 인증 기관이다.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은 3년간 사업장에 사용하는 용수량과 용수 관리를 위한 경영체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철저한 수자원 관리를 환경보호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을 아껴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3R(Reduce·Reuse·Recycle)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왔으며, 용수 사용량 저감을 사업장의 경영 지표로 관리해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청정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무기질이나 미립자가 포함되지 않는 ‘초순수’를 사용하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용수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하고, 멤브레인 기술을 도입해 고농도 폐



수를 정화해 유틸리티 설비에 사용하는 등 폐수 재이용률을 높였다. 또한, 반도체 사업장의 전문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질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으로 30개 이상의 기술직 무교육을 운영해 용수 절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2017~2018년 평균 사용량 5015만 톤 대비 2019년 4911만 톤으로 약 104만 톤의 용수를 절감했다. 이는 20만 인구가 한 달 사용하는 용수 사용량과 비슷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사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DS부문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사무국도 신설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 100% 조달



SK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SK그룹은 환경 경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RE100’에 가입을 확정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한 것으로 구글, 애플, GM 등 글로벌 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ESG 경영을 위해 인사·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SK그룹은 경영 전반을 협의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환경사업위원회를 신설해 환경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가속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했다.

SK그룹 관계사도 ESG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관련 회사인 SK E&S, SK건설,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사 전문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소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SK㈜는 2021년을 ‘첨단소재, 그린(Green), 바이오(Bio), 디지털(Digital)’ 등 4대 핵심 사업 실행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SK건설은 지난달 19일 IBK캐피탈, LX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친환경 사업투자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최 회장은 이미 2018년 CEO세미나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환경 주도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금까지 ESG 이슈들을 적당히 대응 또는 수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정면으로 돌파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태양광·그린수소 사업 2.8兆 투자



한화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와 공존하고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자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가장 한화다운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20년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등급’에서 한화그룹의 6개

상장사 중 4개사가 A등급을 얻었다.

한화그룹은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ESG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1년부터 몽골, 중국 등 사막화 지역과, 국내 매립지 등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한화 태양의 숲’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숲만 축구장 180여 개 크기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수소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투자를 위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선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조8000억 원을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수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고효율 수전해 기술 개발에 약 300억 원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은 연간 총 9.6GW(기가와트)의 셀 생산능력과 11.3GW의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최근 프랑스 토탈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시장에서 태양광사업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7년 10월 창립 55주년을 맞아 한화사회봉사단을 창단,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청소년 과학영재 양성 프로그램



한화사이언스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2018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기획실을 해체하면서 본격화했다.

재활용 섬유 개발·수소 인프라 구축 본격화



효성이 친환경 사업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설립, 탄소섬유 투자, 재활용 섬유 개발 등 그룹 차원의 ESG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행한 ESG 평가에서 효성티앤씨·화학·첨단소재는 A+등급, 중공업은 A등급을 받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 등 관련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한국 기업 최초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등 주요 화학섬유 3종에 대해 모두 재활용 섬유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섬유와 무농약 면화로 만든 면으로 된 티셔츠를 ‘G3H10’이란 브랜드로 선보였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옷 판매도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의 생산, 운송 및 충전 시설 설치와 운영을 망라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린데 그룹과 액화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JV)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린데하이드로젠은 2023년 초까지 효성그룹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톤(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120여 곳에 수소 충전이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 생산된 제품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19년 8월 대규모 탄소섬유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탄소섬유 생산량을 2만400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부품 글로벌 판로 개척



LS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부품 사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베트남 등에 활발히 투자하며 해외 진출 활로를 넓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만·미국·네덜란드·바레인 등에서 1조 원 이상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했고, 당해 11월에는 세계 1위 해상풍력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 폭도 넓혀 가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비롯해 전북 군산 유수지 등 30여 곳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케이블을 공급했다.

해외에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 참여가 늘고 있다. LS전선의 베트남 생산법인 LS비나(는 2019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총 5000만 달러 규모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정부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 1위 전선



업체인 LS전선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기계와 첨단부품 사업을 하는 LS엠트론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의 환경규제를 뛰어넘는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트랙터를 개발했다. 친환경 LPG 전문기업 E1은 싱가포르, 휴스턴 등 해외 지사들을 거점으로 네트워크와 트레이딩을 확대하는 등 해외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S 관계자는 “LS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관련 인재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친환경차 개발·보급 박차



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상세히 알리는 방식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전기차 넥쏘, 수소 트럭 엑시언트, 수소 버스 일렉시티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보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 ‘에이치투’를 확대해 2030년에는 70만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판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대제철도 수소 생산·공급으로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했고, 현대로템은 수소 충전 인프라 신사업에 진출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수소 공급망 관리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해 효율적인 수소 공급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전기차 기술도 고도화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12종의 전기를 출시해 연 56만대의 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 역시 첫 전용 전기차 CV(프로젝트명)를 시작으로 전기차 11종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을 88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와 중



장기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투명하고 정확한 ESG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글로벌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계열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에 동참했다.

현대차는 국내외 CSV(공유 가치 창출) 활동을 비롯해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기업지배구조, 윤리준법경영, 리스크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내부 시스템과 주요 영업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도 보고서 섹션에서 다뤘다.

‘친환경·고효율 인버터’ 적용한 가전 생산



LG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생존을 뛰어넘어 영속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동반성장·사회공헌·윤리 등을 포함하는 ESG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협력사 상생 지원을 비롯해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개발목표) 협회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지속가능리더 100’에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LG는 환경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 및 기술개발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고효율의 인버터 기술을 적용한 생활 가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지



난 9월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권위의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

LG생활건강은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용하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친환경 생활문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또 LG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올해 1조19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 등 거래 분야에 치중된 동반성장 영역을 안전 환경, CSR, 수출입, 복리후생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8200억 ESG 채권 발행 재생에너지 전환 등 투자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이자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고 모든 사업 영역에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화학 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선순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1000만 톤(t)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2050년 LG화학의 탄소배출량은 약 4000만 톤 규모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Renewable Energy 100) 추진을 선언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석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LG화학은 폐플라스틱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최근 세계 최초로 친환경 PCR 화이트 ABS의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LG화학은 재활용 ABS 물성을 기존 제품과 동등

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업계 최초로 하얀색으로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했다. 이 밖에도 LG화학은 PCR PC(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한 폴리카보네이트) 원료 함량이 60%인 고품질·고함량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 글로벌 IT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환경(Green) 및 사회적(Social) 책임 프로젝트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총 82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 일반기업 발행 ESG 채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친환경 원료 사용



생산 공정 건설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 설 △소아마비 백신 품질관리 설비 증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개선 및 교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전액 투자된다.

그린수소 실증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두산은 해상풍력, 수소 연료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가스터빈 등 신사업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는 한편, 계열사별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13년부터 주요 계열사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CSR·ESG 관련 진단을 수행해 그룹 공통 ESG 과제를 추진 중이다.

두산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인권 △EHS(환경, 건강, 안전) △친환경제품 △동반성장 △윤리 △개인정보보호 △사회공헌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통합적인 CSR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30년까지 BAU(일상 경영 활동을 진행했을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량)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에너지 비용 23억 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 8500톤 절감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협약을 체결했다. 두산밥캣은 제품개발 및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저탄소 사용, 유해 물질 저감, 자재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실천하



고 있다.

두산은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CSR 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표이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인권과 노동, 환경, 고객과 제품 관리, 공정 운영, 사회공헌 등 각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됐다. 정기 협의를 통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두산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수상했다.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환경보호 앞장



금호석유화학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안전 경영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가를 지원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가열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외부업체와 함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작업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금호미쓰이화학은 안전요원 제도를 상시 운영해 왔다. 금호폴리켐은 상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협의회를 매달 열고 안전 수칙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최근 대두하는 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업계 내 선제 대응 체계 수립과 내부 기준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에는 사회적 책임



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의료용 라텍스 장갑 200만 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상황이 심각했던 중국 현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다. 또 같은 달 연세대학교의료원을 통해 네팔 소도시 ‘루쿰’에 있는 짜우리저하리 병원에 구호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계열사 직원 모두에게 100만씩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전국 291개 협력업체에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전 임직원에게 한우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 힘내소’ 이벤트로 축산 농가도 지원했다.

자원순환 등 4대 핵심과제 5兆 투자



롯데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해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화학BU는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6조 원 달성 및 탄소중립성장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전략과 목표, 추진 과제를 담은 'Green Promise 2030'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 롯데비피화학 등은 △친환경사업 강화 △자원순환 확대 △기후위기 대응 △그린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과제에 5조20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각 회사의 친환경사업 매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0배 성장시켜 2030년에는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성장성, 사업연관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 스펙트럼 소재 부문을 확대하고, 자원순환과 연계한 재활용 소재 사업도 강화한다.

세브일레본도 올해 초 '미래 10년을 위한 2030 ESG경영'을 선언한 이후 관련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빨대 없는 컵커피' 2종을



선보였다.

이달엔 지난해 전국 가맹점에서 모은 동전 모금액 약 7300만 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 세브일레본의 동전모금 활동은 2018년 친환경 편의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린세븐' 캠페인 선포와 함께 시작된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모금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었다. 모금액은 친환경 생활 주변 확대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롯데슈퍼는 2월 초부터 송파점, 신천점 등 수도권 일부 점포에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11대를 배송용 차량으로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연내 100대까지 전기차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자연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패키징' 선도



CJ가 주요 사업 부문에서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하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은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썩는 플라스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100% 해양에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 (Poly hydroxyl alkanoate)' 생산에 나섰다. PHA는 토양과 해양을 비롯해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바닷물에서 100% 생분해되는 세계 유일의 소재로 전 세계 극소수 기업만 생산 기술을 보유 중이다.

올해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 공장에 전용 생산 설비를 신설하고 연간 5000톤 규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 계획도 세웠다.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 확보 후 향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코카콜라, 나이키 등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일회용·범용 플라스틱 시장이 친환경 소재 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성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와 함께 '3R (Redesign, Recycle, Recover)'에 기반을 둔 친환경 패키징 활동에



도 집중하고 있다. 3R 정책은 친환경 포장 설계(Redesign),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Recycle), 자연 기반 친환경 원료 사용(Recover)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핫한 용기의 구조 변경을 통한 공간 최소화, 100% 물로 만든 보냉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51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원료를 감축했다. 자동차 3673대 생산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백설 고급유의 기존 유색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변경하고 라벨을 붙인 채로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물로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패키지로 리뉴얼했다. 명절 선물세트의 대명사인 스팸 선물세트에는 노란 플라스틱 캡을 없앤 구성을 처음 선보였다.

폐플라스틱 소재 복합 수지 개발... 사회공헌도 활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겠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지난달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GS 신년모임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 발언 이후 GS그룹은 친환경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 'The GS Challenge'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바이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나섰다. GS그룹은 저탄소·친환경 기조에 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GS칼텍스는 천연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 수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해 생산시설 가동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지난해 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캠페인을 시작했다. 친환경 배달 플랫폼 우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도 했다.

우딜은 '우리동네 착한 친환경 배달'을 지향하는 편의점 플랫폼으로 실버세대, 주부, 퇴근길 직장인 등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에 참여할 수 있다. 도보를 이용해 배송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GS그룹은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고 밝혔다.

GS그룹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고, GS칼텍스는 대피소 내 분리형 칸막이와 침낭 등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도 GS는 재난 취약계층과 피해



를 본 분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25는 '우리동네 착한 친환경 배달'을 지향하는 도보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마트 투모로우' 통해 자원재생 캠페인



이마트는 2019년 론칭한 친환경 경영 브랜드 '이마트 투모로우'를 통해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마트는 환경부와 한국피앤지, 글로벌 친환경 사회적 기업인 '테라사이클(Terra Cycle)'과 함께 이마트 79개점에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은 고객들의 참여로 모아진 삼푸통, 칫솔 등 복합재질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세척 및 원료화 등 '업사이클링(Up-cycling)' 작업을 거친 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또한, 이마트는 종이 영수증으로 낭비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부와 함께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있다. '에코 리필 스테이션'은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선보인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리필 자판기'다.

이마트는 매년 희망배달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을 전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월 임직원의 자율적 기부와 그 동일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시스템의 기부를 통해 희망배달 캠페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억 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후원아동 대상 생활비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양식 키트를 지원하고, 패딩 점퍼를 지원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기부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 지역 감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경북지역에 10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약 200만 장의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골목상권 밀키트 구매 취약계층에 기부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T는 광화문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대량 구매해 '밀키트(Meal Kit, 간편조리식)' 형태로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광화문 인근 20개 식당에서 1만 원에 밀키트를 구매하고, 직원들에게 5000원에 판매했다. 회사와 직원이 구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1500개의 밀키트를 기부했다. 밀키트 제작에 참여하는 식당은 지난해 9월 KT가 진행한 '사랑의 선결제'로 인연을 맺은 음식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광화문 인근 식당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자 KT 측에서 각 식당의 대표 메뉴를 간편식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시작했다.

KT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사옥 인근 50개 식당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3개월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주 동안 진행된 '사랑의 밀키트'는 직원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매회 완판됐다.

광화문 인근에서 오리 주물럭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선(60세) 사장은 "지난해 마음 편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최근에는 연말과 연초 대목을 놓쳐 막막함이 더 컸다"며 "KT가 '사랑의 선결제'에 이어 밀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줘 매출 격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고 했다.

KT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광화문과 우면동 일대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KT 사옥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했다. 10월에는 광화문 인근 식당 50곳을 선정해 식당별로 100만 원을 선결제하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는 '사랑의 선(善)결제' 활동을 운영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보름



Digital Leader, 삼성화재RC를 지금 만나보세요

언제나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 온 삼성화재RC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24시간 당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당신이 원하는 순간 스마트하게!



왜 삼성화재 RC가 좋을까?

| 우수인증설계사수 2020년 1위 |

판매/효율/윤리성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가 공인한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2810호 (브랜드전략파트, '20.08.07)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